

다함께 외대 모임

together_hufs@hanmail.net | 011-9937-1755

학교는 조합원 파면결정 철회하라

지난 5월 12일, 박철 총장은 3개월 동안이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조합원 3명에게 파면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박철 총장은 교수들을 동원해 징계를 지지하라는 조합원들을 밀치고 막 말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징계시도가 조합원들에 의해 지지당하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교수쪽 인사위원들만 몰래 모아 징계를 결정했다.

파면은 해고보다 더 심각한 징계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고되는 것이다.

파면 징계는 99년 비리제단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내려진 이후 외대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다. 학교의 전환에 맞서 정당한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나 받는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박철 총장은 그 동안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직원의 노조가입범위에 대해 시비를 걸며 사실상 대화지체를 거부해 왔다.

이번에 파면이 결정된 조합원 3인의 경우에 학교는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해 “무단결근”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아직 협상중인 쟁점을 징계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이번 징계는 총장의 전환에 맞선 정당한 파업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다.



부당 징계를 강행한 박철 총장. 박철 총장이야말로 반지성적이고 폭력적이다

박철 총장은 징계 이후 발표한 담화문과 소식을 통해, 노조원들이 징계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불법을 저질렀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학교는 파면도 모자랐는지 징계 지지 행동을 빌미삼아 4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징계하려 한다!

학교는 직원들이 폭력을 일삼고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노조원들은 부당한 징계시도를 막기 위해 집단

적으로 저항했을 뿐 개인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박철 총장은 시종일관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심지어 주먹까지 휘둘러 조합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보복

진정으로 폭력적인 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헌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직원 3명의 생존권을 박탈한 박철 총장이다.

박철 총장은 조합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불법적인 것은 학교다.

학교는 “파업 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참가해야만 징계위원회가 성사된다는 단체협약도 무시하고 학교쪽 위원들만 참가한 상황에서 징계를 결정했다. (따라서 이 징계는 법률상 무효다.)

학교당국은 지방노동위원회도 합법이라고 인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매도할 정도로 파업을 파괴하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학교가 발행한 소식지는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시대착오적”이며, “군사독재시대의 악법인 유신헌법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우기고 있다. 박철 총장 자신이 민주화 투쟁의 성과인 노동법을 강그리 무시함으로써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취임 이후 박철 총장은 일관되게 직원과 학생들을 공격해왔다.

박철 총장은 등록금 두자리수 인상과 직원 해고가 외대개혁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박철 총장은 본교 직원들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후생과(식당) 등에서 일하는 조합원들과의 교섭도 거부하며 노동 탄압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학교는 식당을 폐업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학교의 이런 전환에 맞서 직원들과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도 직원 징계에 반대해야 한다.

박철 총장은 파면을 당장 철회하라!

노조탄압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박철 총장은 지난 3월 27일 <교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학교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돼 왔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뚜렷한 변화를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철 총장의 “변화와 도약”은 학생과 노동자들에게는 악몽과 같다.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박철 총장의 첫 작품은 학교의 전환에 항의하는 노동자 해고와 등록금 두자리수 인상

이었다.

박철 총장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며 노조파괴 의도를 드러냈다. 이것도 모자라,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에게나 내려졌던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파업참가 노동자에게 내렸다.

직원 노조의 파업파괴에 혈안이 된 학교는 학생들에게도 끔찍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외대 학생들은 이미 ‘상대평가제’, ‘졸업인증제’ 등의 경쟁강화 조치와 3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박철 총장은 여기에 학사관리 엄정화, 등록금 인상 등 더 한 층의 고통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려 한다.

이처럼 가난한 학생들의 신음소리

에 귀 기울일 생각이아곤 없는 박철 총장은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머지 기여입학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

학교는 더 나아가 “적자가 나는 학교식당을 골치 아프게 왜 학교가 책임져야 하나”며 식당 폐업을 추진하려 한다. 식당 외주화는 기존 직원들의 대량 해고뿐 아니라 학생들의 식비 인상과 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직원과 학생 모두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미 식당외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대 식당이 아직 외주화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했기 덕분이다.

반면, 박철 총장은 정부의 대학지원

액이 전체 대학재정의 22.7%에 불과한 현실(OECD 평균은 78.1%이다)은 외면한다. 적어도 매년 37억이 지불되어야 할 외대의 재단전입금이 몇 년째 6억에 불과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이러면서 학교 침체의 원인을 학생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실 박철 총장의 이런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이 생소한 그림은 아니다. “등록금이 1500만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학생들은 등록금 적게 내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고려대 어운대 총장이 몇 년째 고려대에 도입하고 있는 ‘기업경영마인드’가 박철 총장이 따르고자 하는 길이다. 취임 전부터 박철 총장은 몇몇 보직교수들과 함께 고려대를 방문해 어운대 총장의 “경영철학”을 배워

온 바 있다.

고려대가 정경유착·편법 상속·노동 탄압의 ‘대명사’인 삼성 이권회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은 이러한 친(親)기업적 행태의 절정이었다. 고려대는 이런 흐름에 반대한 학생들에게는 출교라는 초강수를 뒀 입막음하려 했다.

박철 총장의 노조 탄압 역시 학교의 전환에 맞선 학생과 직원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박철 총장이 노조탄압에 성공하면 평범한 학생과 직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대학이 경쟁과 착취를 우선순위에 두는 끔찍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연대와 공공성이 살아 숨쉬는 학문 탐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박철의 전환에 맞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

학교가 왜곡하는 파업의 쟁점

진보언론인
홍세화가
말한다 2

학교의 근거없는 48명 조합 탈퇴요구

이번 노조의 파업은 박철 총장이 과장급 이상 조합원 48명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이들이 조합을 탈퇴하기 전까지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기본적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실제로 학교측 교섭위원인 이정 교수 스스로도 자신의 저서인 노동법 강의에서 “노동조합에서 외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더구나 과장급이라 하더라도 보직 교수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일해야 하는 직원들은 노동자에 더 가깝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노조에서 과장급 직원들도 노조에 가입해 있다.

조합원 자격 시비는 정리해고와 학교의 일방적 전횡에 항의해 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학교가 내세운 핑계일 뿐이다.

노조위원장이 인사권 독점?

학교와 총학생회는 노조가 직원 인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약자라도 된

것처럼 업살을 떨고 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5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데 이어 이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3인에 대해 파면을 한 것에서도 보듯이, 인사권의 전권을 휘둘러온 것은 학교다.

박철 총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사권은 ‘총장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참가하는 것을 아예 막으려 한다.

그러나 해고와 징계,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싸우는 것이 노조 본연의 역할이다. 따라서 학교의 부당한 전횡을 막으려면 노조의 징계 및 인사위원회 참가는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해고

학교는 이번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박철 총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학교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노조가 투쟁을 통해 이룬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를 없애려 한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대학생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들의 60%나 되는 사회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룬 외대 노조의 사례는 더 확산되어야 할 사회적 모범이다.

귀족노조?

학교는 외대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귀족노조’ 운운하고 있다. 외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평균 노동자 임금에 비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공비와 보직수당만 3억 이상을 받는 박철 총장은 ‘귀족노조’ 운운할 자격이 없다.

반면, 이번에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월급은 84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 온 것이 바로 직원노조였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려는 학교가 직원노조를 ‘귀족노조’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특권층은 따로 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학수는 수십억원이 넘는 연봉 이외에도 스톡옵션 등 수백억원의 ‘부정기적’ 수입이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이라고 비난받는 동안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일가 재산은 1조 2천억원으로 1년 사이 갑절 넘게 불었다. 노무현 재산도 취임 후 1년 동안 4억 이상이 늘었다.

이 진정한 귀족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어 노동자 임금은 올리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나온다. ‘귀족노조’ 논리는 진정한 특권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외대 총학생회는 대학권력의 ‘마름’

요즘 황당한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은 강정구 교수에게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 한나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려대는 학생들에 대한 출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건대 차별과 학내 문제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학생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한국의대에서는 대학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총학생회가 이를 성토했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불모로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법이 ‘ㅈ’ 신문(조선일보) 사설과 똑같습니다.

대부분 예비노동자들인 대학생들의 조직인 총학이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학내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고 연대하기는 커녕 대학권력의 ‘마름’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대에서는 총학이 민주당 학생위원회의 활동이 자치활동이 아니라며 학생회관 사무실을 반납하라고 결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과거 학도 호국단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대학은 산업이다’... 인문정신과 비판정신의 거처여야 할 대학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음의 의미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직 남보다 더 배부른 경제동물이 되려는 계산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략)

*이 글은 《한겨레》인터뷰 판 ‘홍세화의 수요편지’에 실린 글입니다.

학교와 유착한 총학은 학생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총학생회는 다함께가 “허위사실유포”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전 총학생회장 송일환의 등록금 인상 합의 등 다함께가 제시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얼마 전 스페인어과 총회에서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통과된 것에서 보듯이 많은 학생들이 “총학생회는 왜 등록금 투쟁을 하지 않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파업 때문에 등록금 투쟁을 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파업 파기에만 앞장서고 있다.

총학생회는 4월 11일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난입한 것도 모자라 4월 27일에는 노동자들의 파업 집회 장소를 점거했다. 최근에는 매일같이 노조원들을 졸졸 쫓아 다니며 노조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는 선전을 하고 수백만원을 들여서 46쪽에 달하는 노조 파업 반대 책자를 내는 등 계속해서 파업 파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월 12일에 총학생회는 부당하게 노조원들을 징계하려는 교수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부당 징계를 막기 위해 모여 있는 노조원들에게 총학생회와 함께 온 동양어대 학생회장은 “스키 풀대 좀 가져와. (직원들) 확 찍어버리게”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



5월 12일 부당한 노조원 징계를 위해 모인 총학생회 지지자들. 파업 파괴 현장에는 언제나 그들이 있다.

으며 노조원들을 위협했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여론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노조에 대한 비상식적 적개심만으로 뽄뽄 뭉쳐있다. 총학생회는 대자보 훼손과 4월 11일 폭력시태를 사과하라는 서명을 한 838명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도 “대자보 훼손도의 사표현의 한 방식이다”는 주장을 굽

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뻔뻔스럽게도 4월 11일 노조 파업장에서 벌인 폭력행위가 평화적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학생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학교와 유착해 파업 파괴 활동만 벌이고 있는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외대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배신에 항의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총학생회를 규탄하기 위

한 행동에 많은 외대인들이 함께 참여하자!

5월 22일 전학대회에 총학생회의 대자보 훼손과 파업 농성장 폭력행위를 사과하라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30여명의 대의원들이 안건 발의에 동참했다. 외대의 민주주의를 지킬 대의원들은 모두 이 날 전학대회에 참여해 총학생회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행동에 함께하자.

함께 합시다!

1. 총학생회의 폭력행위 사과 및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외대인 모임에 가입하세요! 학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을 환영합니다. 011-9744-1561이나 freespeech06@hanmail.net 으로 가입 의사를 밝혀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 지지의 글을 보내주세요. freespeech06@hanmail.net으로 지지의 글을 보내주세요. 짤막한 글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자보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 후원해 주세요. 소액도 좋으니 운동에 대한 지지를 후원을 통해 표현해 주세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570202-01-027233(여승주)